

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에  
관한 문제의식들

林書揚

主催：「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執行委員會

主管：台灣事務局・台灣地區政治受難人互助會

協贊：日本事務局、韓國事務局

後援：中國統一聯盟

台灣社會科學研究會

夏潮聯合會

勞動黨

時間：1997年2月22日～23日

場所：劍潭海外青年活動中心（台北市中山北路四段十六號）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에  
관한 문제의식들

林書揚

##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에 관한 문제의식들

林書揚

여러 귀빈께서 오늘 멀리 한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 천리 길을 마다하고 97년 타이베이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것에 대해, 본인은 대만의 심포지엄 집행위원 동인과 모든 관련 단체 동인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중국의 유교 경전의 하나인 '논어'의 첫 마디에 “먼 곳에서 친구가 오니 몹시 기쁘다”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인은 감히 공자를 자기 비유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멀리 타국에서 오신 친구들이 뜻을 같이 하기에 타이베이에 모이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고 고무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여기에 온 귀빈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와 눈부신 연구 성과를 올린 소장 연구자, 올바른 사회의 추구를 평생 사업으로 하는 사회운동권의 걸출 인사 그리고 종교 문화계의 중요 지도자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 업무를 맡은 우리로서 그 기쁨과 흥분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 세기가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만에서 이러한 성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주·객 쌍방의 공동된 노력이라고 생각되고 참여 해주신 모든 분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대회의 첫 번째 발언자로서 본인은 먼저 이 번 대회의 유래와 취지를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이 순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 잠시 후 대회준비위원회 동인이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심포지엄의 주제 내용에 관해 저 개인의 몇 의견을 제출하려 합니다. 참석해 주신 귀빈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심포지엄의 총 주제는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입니다. 우선 설명해야 할 것은 주제 머리에 “동아시아”라는 한정 어를 부친 것은 일부러 지리적 구별을 가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동아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리적 공간에서의 특정 지역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 현대사에서의 제국주의의 수난지역이라는 기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사 학자의 이론의 의거해 과거 시기의 일본을 “중진자본주의”이라는 대체적 자리매김 한 것 외에 한국과 대만의 과거 시기는 분명한 자본 제국주의 식민지였다. 그리고 이들 두 나라는 같은 식민지자본주의의 초기 형태에서 출발하여 2차대전 후 냉전 진행 과정에서 상관된 요소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소위 신식민지후진자본주의사회로 자리매김 받았다. 이러한 구식민지에서 신식민지로 이행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사회 전통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 조건을 초월하여 2차대전 후 전통 제국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수반된 현상으

로 나타났고 또 현실적으로 이는 자본 제국주의의 세계 통제 체계의 생명 유지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럼 이러한 2차대전 후에 소위 신식민지후진자본주의사회의 공동 체질은 어떠한 특징은 가지고 있는가?

아래에서 본인은 몇 개인적 관점은 제시하려 합니다.

먼저, 독립적 주권은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는 외세에 종속되고 있다. 그 다음은 외국 경제 강권에 의존한 수탈적 투자는 자본순환과 그 확대재생산의 총 과정의 몇 관건적 부분에서 불평등교환을 감수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 정치 경제 영역에서의 수동과 제한 때문에 내적 구조의 왜곡이 발생함으로써 전체적 발전에서 낙후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즉 종속성·파행성·낙후성이 바로 신식민지사회의 역사적 성격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성격이 한 사회의 권력구조 혹은 권력 본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규정짓는지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관점으로 낙후 지역의 제한된 근대화 발전의 최대 관건은 선진 자본주의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주성 즉, 정상적 발전의 결여가 아니라 외세의 침투 하에 수동적 변혁에 있는 것이다. 그의 내적 구조 변화 과정이 내적 메커니즘의 완전한 지양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고유의 발전원리는 그 활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전 자본주의 단계의 구 경제 요소들 혹은 봉건적 토지관계의 잔재에 대한 청산 작업도 역부족으로 철저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경제 제 관계는 대부분 이식적 성격을 띠어서 선천적 부족과 후천적 부조화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구조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계급 분화의 지연·불확실과 새로운 관계와 기존 관계의 혼재 상태 그리고 사회 심리적 혼돈 및 권력기초의 취약성이고 이런 상황 하에서 권력 본질은 더욱 반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바로 취약성과 폭약성의 악성 혼합체인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적 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권력의 유지를 강압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폭약성은 민심을 더욱 멀리하게 하고 권력은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국가권력이 일단 이러한 특징을 가진 정권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제도적 견제 장치가 결여하는 상태에서 국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의 실체로 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모든 비판자 혹은 반대자는 공포 정치의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

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반세기 동안의 격동기를 거쳐 대만이든 한국이든 혹은 기타 나라이든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공간은 바로 위와 같은 역사적 고난과 아픔의 상징이고 심지어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 50년대, 60년대를 돌이켜보면 한국의 이승만 정권, 대만의 장개석정권, 필리핀의 맥그스에이스에이(magsaysay) 정권, 베트남의 오정염(吳廷炎) 정권, 캄보디아의 룡노이 정권, 태국의 타농 정권 등등 이들 중 어느 하나든 진실로 민중을 대표할 수 없고 어느 하나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진보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진보적 맹아를 육성할 의도가 없다. 그들은 시중일관 자기 개인과 지배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중의 자발적 개혁운동을 탄압해 왔다. 특히 한국과 대만에서 반동정권은 내전에서 붕괴 위기에 처하자 미국의 반공 선봉대원으로 투신하여 조국의 분단을 불사하고 외세를 빌려 자기 동포를 유린하였다. 그리고 내전을 반대하고 민주화와 평화를 요구하는 모든 민중들을 도적으로 몰라

군사적 숙청을 잇따라 발동하였다. 이러한 공포의 폭풍우가 천만 민중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시기에 수많은 숭고한 이상은 품은 민중들이 목숨을 바치는 일 외에도 간혹 억눌린 민중의 노분가 파도가 되어 권력구조를 삼키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는 피에 피로의 동족상잔의 비극이며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었다.

그러나 소위 기반이 취약하고 강압 통치의 낙후 지역 정권들은 어떻게 해서 그래도 많은 경우 민중의 항거를 견디어내고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들 지지 기반이 극히 취약한 정권들은 대부분 미제국주의의 전 지구적 냉전 전략 배치구도의 한 거점으로 편재됨으로써 일정한 실질적 보호와 혜택을 받게 되는 데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심포지엄의 총 주제에서 “동아시아”라는 단어 뒤에 있는 “냉전”이라는 단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2차대전 후에 만들어 낸 단어는 그 내용은 통상적 공방 무기를 사용한 실제 전쟁이 아닌 단지 정치 전략적인 지도 아래 행하는 정치 전쟁, 경제 전쟁, 문화 전쟁, 사상전쟁의 총칭이다. 이러한 냉전 구도의 형성은 아래와 같은 요소의 의해서이다. 2차대전 후 참전한 전쟁 기억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의 대한 혐오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새로 발명한 핵무기의 파괴력이 가지고 있는 지구멸적 공포감 등 때문에 대규모 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계 심리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미·소 양대 초 강권이 끊이지 않는 핵무기 경쟁은 통해, 소위 “공포적 균형” 개념을 이루면서, 주동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공격받은 후에 반격 시스템 위주의 전쟁 지도 이념 등을 수립함으로써 대규모 열전의 폭발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굳은 전쟁 기피 심리 하에서 왜 세계 각지에서 부단히 일어나는 반전 평화운동이 아직도 그 모든 대항 요소들을 제거하고 냉전적 대립 구조를 뿌리째 뽑아 영속적 세계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라간 혹은 지역간의 모순은 “대항을 대화로 대체”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영역 혹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대립 요소가 만약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어 내려온 대립에 속하든가 부분적 이해의 일시적 모순 등이라면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그 타협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소의 국익에 관련된 사안 혹은 동서 양대 집단의 공동된 이해에 관한 모순이라면 왕왕 영원한 미해결 사안으로 남아 심지어 외연적 부분의 일시적 군사 충돌까지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냉전은 모든 열전의 부정이 아니라 단지 동서 양대 진영이 안전과 발전전략의 첨예한 상호 대립성으로 유발한 지속적 대립 국면으로 인해 전면적 무력충돌의 하한선까지 어렵게 억제되었던 것이다. 즉, 이른바 “분쟁은 있으나 전쟁이 없는” 상태이다. 미국은 유럽, 아시아 심장부분의 확장 추세를 막기 위해 50년대부터 지역적 반공연맹을 잇따라 구축하고 그 구축 과정에서 연맹은 힘을 탄탄히 하기 위해 흔히 각 지역의 집권 세력에 대해 회유책을 써왔다. 미국이 가맹 국가에 요구하

는 것은 해당 정권의 합법성 혹은 합리성이 아니라 집권의 실제 능력과 효율이었다. 이에 해당 지역의 나라로서는 미국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 것은 최강의지지 역량을 얻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는 그 본래의 취약 체질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믿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권의 희생을 대가로 피보호권을 취득한 후에 이들 원래부터 반동 보수 성격을 지닌 정권은 치하에 있는 민중에 대해 더욱 구애받지 않는 일방적인 강압 통치를 단행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최소의 민주화 원칙마저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폭력 통치를 강행하였다. 한 정부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민중을 탄압했을 때에는 분명 상당한 상황 장악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이러한 노골적인 폭력 통치는 자살 행위 외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가맹국가 혹은 쌍변 안전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는 미국의 정책에 협조과 순종을 하고 쌍방 조약의 의무를 다한다면 그들 국내에서의 어떠한 폭거도 미국의 질책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내부의 정치 상황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원조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서 정의롭지 못하나 힘이 있는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이들은 미국식 반공 가치관을 추종하면서 제국주의 전쟁원칙인 “반공지상 학살무죄”를 철저히 지키고 반공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민중을 적으로 몰아 공포적 공격을 가하고 국가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민중의 기본 인권마저 유린했다. 우리는 냉전 중에 처해 있는 여러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정부의 대학살의 배경이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입장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고 혹은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허락과 영향 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추론한 결과 본인은 국가적 폭력과 기본 인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적 탐구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소위 국가적 폭력은 국가권력의 마지막 수단이자 국가 조직체의 종국적 본질인 것이다. 우리 개개인은 자기가 속하는 국가 조직에서 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명칭의 외적 강제 혹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 중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국가 공권력적·정치적 강제이다. 그가 최대한으로 작용할 때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의 생존권까지 직접 부정하고 말살할 수 있다. 국가는 여러 개체를 모여 일정한 내재적 관계를 가진 집단을 형성하고 이를 구축·유지하는 과정에서 그는 지상의 통제력과 장악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절대 부정하고도 무자비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가는 개인 최대의 압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초역사적 순수 이념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 진보의 관점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본다면 아래와 같은 몇 기본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생물학적 범주의 자연인이 아니라 집단의 내적 관계가 다양하게 작용하는 사회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에 부속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위 기본인권도 자연인의 본능적 차원의 욕구 문제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인으로써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아긍정·상호존중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리고 집단의 의지로 보장 받아야 할 기본권리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집단에서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보장인 것이다. 이러한 보장만이 역사 발전

과정에서 국가 존립의 도덕적 요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 기능이 철저히 행해 질 때만이 국가의 존재 자체가 절대악 인식에서 모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가와 인권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집단적 조직에서 계급적 모순이 존재했을 때 민중들은 불평등한 계급적 지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기본 생활에서 불평등 처우를 받아 왔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리 형식에서의 평등적 인권 규정은 실질적 내용이 결여한 명목상의 인권에 불과하다. 즉, 국가에 내적 구조에서 계급 대립적 제도가 내포되어 있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대한 상위 계급의 기능적 착취와 정치적 약탈은 모든 실질적 내용을 가진 인권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발표된 인권선언 제17 조에서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 그리고 정신생활적 요구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 분명 경제권에 속하는 재산권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충분한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은 인권에 대한 보장도 얼마 받지 못한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바라보았을 때 강대국의 통제를 받는 상황하에서 즉, 제국주의 패권의 지배 체제 아래서 통제를 당하는 약소 국가는 주권의 독립마저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중의 기본권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론적으로 국가 내부의 계급적 착취 메카니즘과 그 연장선 상에 있는 국제간의 침략 행위는 모든 정치적 비극의 근원이고 국가의 폭력 기구는 바로 착취와 침략의 마지막 수단인 것이다.

국가 기구가 한 개인 한 정당한 계급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국가 권력은 공포의 반동물이 되어 버릴 것이다. 여기에서 민중의 자위 행위도 처벌받고 심지어 무참히 유린당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극의 속속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주국가들은 어떠한 국가 기능도 광범위한 민중의 동의의 기초 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지금 세계적으로 절대 군주 국가는 사라진지 오래고 이른바 민중 주권 국가관이 이미 보편적 원칙으로 되어 버렸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민중적 동의, 근시적이고 교환적인 민중적 동의, 강압적이고 선동적인 민중적 동의, 금권 작용 하의 민중적 동의 등이 얼마나 성행하고 원숙히 진행되고 있는가! 이러한 “형식적 민주”의 동의 과정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정부는 그 심층적 의식 구조에서 민중과 사회 발전에 대한 성의는 도대체 얼마 남아 있을까? 이러한 정권이 그 존재 기반이 동요하고 권력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 정상적 의회 민주적 정당 제도마저 정세 유지의 힘을 잃어버린 때 바로 국가적 폭력이 법령을 무시하고 발동하는 시기이다. 즉, 이른바 백색테러의 전면적 전개인 시기이다. 그리고 이 것이 바로 30년대 독일, 일본, 이태리, 등의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은 휩쓸었던 파시즘 선봉과 수십 년 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후진 지역을 부단히 정치를 격동으로 민중을 고통으로 몰아 넣는 구조적 원인이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침통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언제나 국가 폭력의 최후 수단을 사용하려 하는 정권은 억압적 기구의 작동 외에도 항상 사상 의식 영역에서의 통제 체계를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이는 일부 민중의 인식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폭정에 대한 민중의 항거 혹은 비판 운동은 왕왕 민간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저지에 부딪히고 혹은 일종의 정치 실용주의의 풍자를 당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여론”에서는 도덕적 상대론을 제시하여 민중을 호도 시킨다. 나아가 이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규명과 억압 실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윤패당한 정부의 악행 기록에 대해 민중들의 관심을 일으킴으로써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민중의 자발적 운동 등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내와 불굴의 의지와 국경을 초월한 민중 연대를 통해서 국가권력에 대한 민중의 정당한 비판 체계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 악질화된 국가권력 장치에 대한 일상적 폭로, 특히 민중의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폭로 등은 모든 운동의 초기 목표라 할 수 있겠다. 우리는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의견 교환과 상호 지원 그리고 연대 행동을 취한다면 단시일 내에 운동의 차원을 높이는 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일 것이다. 그리고 이 번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 학술토론회”의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본인은 여러 귀빈들의 긴 시간의 할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서 오신 여러 귀빈들께 즐거운 타이페이 나들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